

# 전동킥보드, 제도정비·의식개선 시급

### 2인탑승·인도질주 '위태'...무분별 주정차 불편 가중 도로교통법 안전 규정 있으나...되려 규제 완화 사고 매년 증가...“법령 다듬고 안전 의식 높여야”

“지금보다 규제가 풀리면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질 겁니다. 걱정이 큼니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동킥보드의 무법 질주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법령 미비와 낮은 단속 실효성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규제는 오히려 완화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캠퍼스.

전동 킥보드가 인도 한 가운데를 뚫고 달리자 보행자들이 황급히 양 옆으로 물러났다. 귀에 이어폰을 끼 채 걷던 한 시민은 스칠 듯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를 보고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규정 탑승 인원 제한을 어기고 2명이 탑승한 킥보드도 이따금 보였다. 이들은 무게 중심을 잘 잡지 못해 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조향 장치를 이리저리 꺾었다.

차도를 질주하는 킥보드도 위험천만해 보였다. 킥보드 운전자는 자동차와 나란히 달리다가 후사경에 부딪힐 뻔한 것을 가까스로 피했다.

대학생 이모(22)씨는 “도로를 달리던 킥보드가 차량과 부딪칠 뻔한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전동킥보드의 운행

과 교통 안전에 관한 법령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장모(20)씨도 “최근 부모님의 차량에 타려다 갑작스럽게 튀어 나온 킥보드에 치일 뻔했다”며 “차도와 킥보드가 주행할 도로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가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도 골칫거리다. 행인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인도 한 가운데에 덩그러니 세워진 킥보드를 피해 걸었다.

송모(22)씨는 “밤에 길 한복판에 쓰러져있던 킥보드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며 “킥보드 주·정차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제는 실효성이 뒤떨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전동 킥보드 13개 주·정차 금지구역’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별로 기준을 만드는 수준이다.

전동 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할 경우엔 4만 원 이상,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이상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공유서비스 업체를 통한 이용 방식, 무분별한 주행 행태 등을 고려하면 실제 단속은 여의치 않다.



오히려 다음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는 현행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크게 낮아진다. 또 기존에는 차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일정 규격(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로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전모(26)씨는 “옛날 보이는 학생들이 킥보드를 탄 채 장난을 치며 인도를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아찔하다.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청소년들이 속도가 빠른 킥보드를 몰다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이모(34)씨는 “전동 킥보드는 일반 자전거보다 빠른 속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가속력이 좋다.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며 “타상공원이 아니라 현장 실재를 정확히 파악해 교통법규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3건 ▲2018년 15건 ▲2019년 18건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에는 1월부터 8월까지 벌써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달 12일에는 새벽시간대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가 충돌, 양측 운전자들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 건수도 증가세다”며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수면제 든 커피 먹여 청소도우미 성폭행 30대 징역 7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청소 도우미에게 수면제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신상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청소 도우미 호출용 스마트폰 앱으로 30대 여성 B씨를 광주 지역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수면제·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47분께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18시간 동안 의식을 잃게 한 뒤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2차례 복역했고 출소한 지 나흘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봉우기자

## 귀가중인 50대 여성 뒤따라가 흥기 휘두른 남성 검거

전남 여수경찰서는 13일 지인을 흥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26분께 여수시 모 아파트에서 B(57·여)씨를 흥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귀가 중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사장 이사 돕다가 슬쩍’ 상습 절도 20대 구속

자신이 일하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과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인테리어 업체 직원 A(2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9일부터 10월7일까지 광주 남구 효천동의 사장 B(48)씨 자택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이삿짐에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 등 3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앞서 9월 초 전남 목포의 주택을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 방문했다가 고객의 금팔찌(3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4개월 간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훔친 귀금속을 팔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업무차 방문한 고객의 자택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A씨의 범행은 점차 과감해졌으나 결국 털미가 잡혔다.

김민정기자

## 서귀포에서 스쿠버다이빙하던 40대 캐나다인 사망

제주 서귀포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외국인 남성이 숨져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소방과 해경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께 제주 서귀포시 설섬 인근 해상에서 캐나다 국적의 A(49)씨가 의식을 잃은 채 떠올랐다. A씨는 일행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하고 있었다.

119구조대 도착 당시 배 위에 있던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응급처치(CPR)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보복포구를 출발해 수중레저업체 강사 등 5명과 스쿠버다이빙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

## 사병 극단 선택...법원 “지도 소홀 부서관 견책 정당”

### “면밀한 관찰·상담 안 해, 극단 선택 발생”

복무 부적응 문제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육군 사병에 대한 관리와 지도 의무를 소홀히 한 부서관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서관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중순부터 육군

모 사단 연대 소대장으로 일했다.

A씨는 자신의 소대에 배치된 전입 신병 B씨의 입대 전 복무 적합도 검사 결과(정신건강 전문가의 정밀 관찰 필요)를 뒤늦게 확인하고도 보고를 누락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복무 적응도 검사에서 ‘2차례 해석 불가’ 판정을 받은 B씨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했다.

A씨는 배려 병사로 지정된 B씨를 지난해 4월 개방된 소초 상황실에서

인성 검사를 하게 했다. B씨는 대인관계 어려움, 병영 부조리 목격, 심리적 외상 등 8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A씨는 면담 과정에 B씨가 ‘특정 항목에 대한 답변을 꺼린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주기적인 정밀 면담, 가정과 연계한 신상 관리 등)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5월 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 성실의무 위반(지휘·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 처분의 주요 사유는 극단적인 선택 징후를 조기에 발견·예방하는 등의 병력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처분에 불복,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B씨가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만 인식, 반복적인 질책성 교육을 했다. 중대장이 B씨의 관리 등급을 배려 병사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상향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미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